보도자료 시행일:2019.7.18.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박금자 / 담당자 : 박정호 정책실장(010-3238-3705) / E-mail : kctuedub@daum.net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9 예인빌딩 10층 / http://www.hakbi.org/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아래와 같이 보도 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제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11시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민태호 사무처장)
11:05~11:15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경과 보고 & 교섭파행 교육부·교육감 규탄 발언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실무교섭 대표교섭위원)
11:15~11:25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 당국 규탄 발언과 2차 총파업 선포	박금자 위원장 (본교섭 대표교섭위원)
11:25~11:30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4〉 18페이지 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 (본교섭 위원)
11:30~12:35	7.20. 총파업선포대회 등 향후 일정 공지	사회자

■ 기자회견 취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총파업을 진행했다.

○ 연일 언론에서 '급식대란, 돌봄대란' 이란 말이 나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중에도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은 없었다.

○ 문제는 파업 이후 다시 마주앉은 본교섭 자리에서 사용자측은 파업 전 내놓은 안(기본급 1.8%인상, 사실상 동결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파업기간 약속한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여를 막고, 여전히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시·도교육감들을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파업이후 진행된 1박2일 실무교섭과 본교섭까지 교섭경과를 설명하고, 교육당국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교섭 파탄의 과정을 대표교섭위원이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 또한, 7월 16일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의가 2차 총파업 결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총파업을 공식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붙임 1

교섭 경과

○ 4월 1일 교섭요구, 4월 4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공통 임금요구안 제출

○ 5월 9일~6월 14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89.4%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6월 14일, 절차합의

① 당사자 : 교육부,교육청(사), 연대회의(노)

② 교섭주기 : 본교섭 : 월1회 / 실무교섭: 2주3회

③ 교섭위원 : 본교섭: 18명 (참관30명) / 실무교섭: 6명 (참관3명)

④ 교섭의제 : 기본급(2020년포함),각종수당(직종별수당포함),복리후생비로 한다

○ 6월 19일(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쟁의권 확보

○ 6월 27일(목) 실무교섭

– 노동조합 임금교섭 핵심요구안

○ 전직종 기본급 6.24%이상 인상(20년 기본급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 사용자안

○ 기본급 1.8% 인상 외 전면 수용 거부

○ 사실상 임금동결 –〉2019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이미 해마다 자동 적용되었음.
(공무원 최하위직급 약 10% 인상)

○ 7월 2일(화) 실무교섭 : 사용자측 어떠한 진전된 안 제시도 없었음, 차별해소 의지도 없고 국정과제 및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도 없었음.

○ 7월 3일(수)~5일(금)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 7월 9일(화)~10일(수) 실무교섭 : 교육부 포함 교섭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시도교육청만으로 교섭위원 구성하는 등 불성실 행태로 교섭 개회도 못하고 파행

○ 7월 16일(화) 본교섭 (1차)

- 임금요구안에 대해 지난 실무교섭(6/27) 사용자안(기본급 1.8% 인상 외 전면 수용거부)과 동일한 입장 제시와 교육부 실무교섭 참여 재차 거부
- 교육당국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없음 재확인
- 노동조합,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태도와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입장 변화시까지 실무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교섭중단과 총파업 및 총력투쟁 준비 선언하며 교섭 결렬

※ 절차교섭 및 실무교섭, 본교섭까지 총 12회차 교섭 진행

[노조요구안 및 사용자 입장]

일시	노조 요구안	사용자 입장
6월 27일 실무교섭	○ 기본급 전 직종 기본급 6.24%이상 인상 (20년 기본급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근속수당 급간액 40,000원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 정기상여금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 2019년 기본급 -1유형: 1,867,150원 -2유형: 1,672,270원 (약 1.8% 인상안) - 1·2유형 외 직종: 현행유지 ○ 직종별 수당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최저 9만원 조리사 자격가산수당 정률 5% ○ 그 외 전면 수용거부

일시	노조 요구안	사용자 입장
7월 2일 실무교섭	- 위와 동일	- 입장변화 없음.
7월 9일 ~ 10일 실무교섭	- 노조 요구안 위와 둥일 - **교육부 실무교섭위원 참여, 노사합의 이행**	- 입장변화 없음. **-교육청만으로 교섭위원 구성, 교육부 실무교섭 참여 거부**
7월 16일 본교섭	- 노조 요구안 위와 동일 - **공정임금제 실현위한 6대 임금공통요구안** **우선 교섭 후 직종요구안 제출여부 검토**	- 입장변화 없음. - 직종요구안 제출시, 임금공통요구안 검토

붙임 2 **교육당국의 거짓말 교섭 대국민사기극의 근거**

거짓말 1.

총파업 직전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가에서, 총파업 후 교육부의 불참 결정

7월2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집단교섭에서, 교육부의 교육공무직지원팀 김동안과장은 실무교섭에 30분 지각참석하여 모두를 기다리게 한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위원으로 참가하여 성실교섭을 약속했다. 그러나 총파업 이후 지난 9일 11시,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교육부의 실무교섭 불참을 결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섭석상에서 장시간 항의하자 결국 사용자측 00도교육청 000 교섭위원은 '교육부의 참가로 공정임금 요구가 쟁점화될 것을 우려하여 직종문제를 먼저 다루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교섭지연 전략임을 자백하였다.

> **지난7월2일자 YTN 뉴스 보도** : 교섭장소 대여시간에 쫓겨 오후1시~오후3시30분까지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실무교섭을 오후4시경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동하여 실무교섭을 이어감. 최종결렬 관련하여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언론브리핑하는 김동안 교육부 팀장

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교섭 재개...접점 찾을까

오전 세종서 만남...교육부 "성실히 교섭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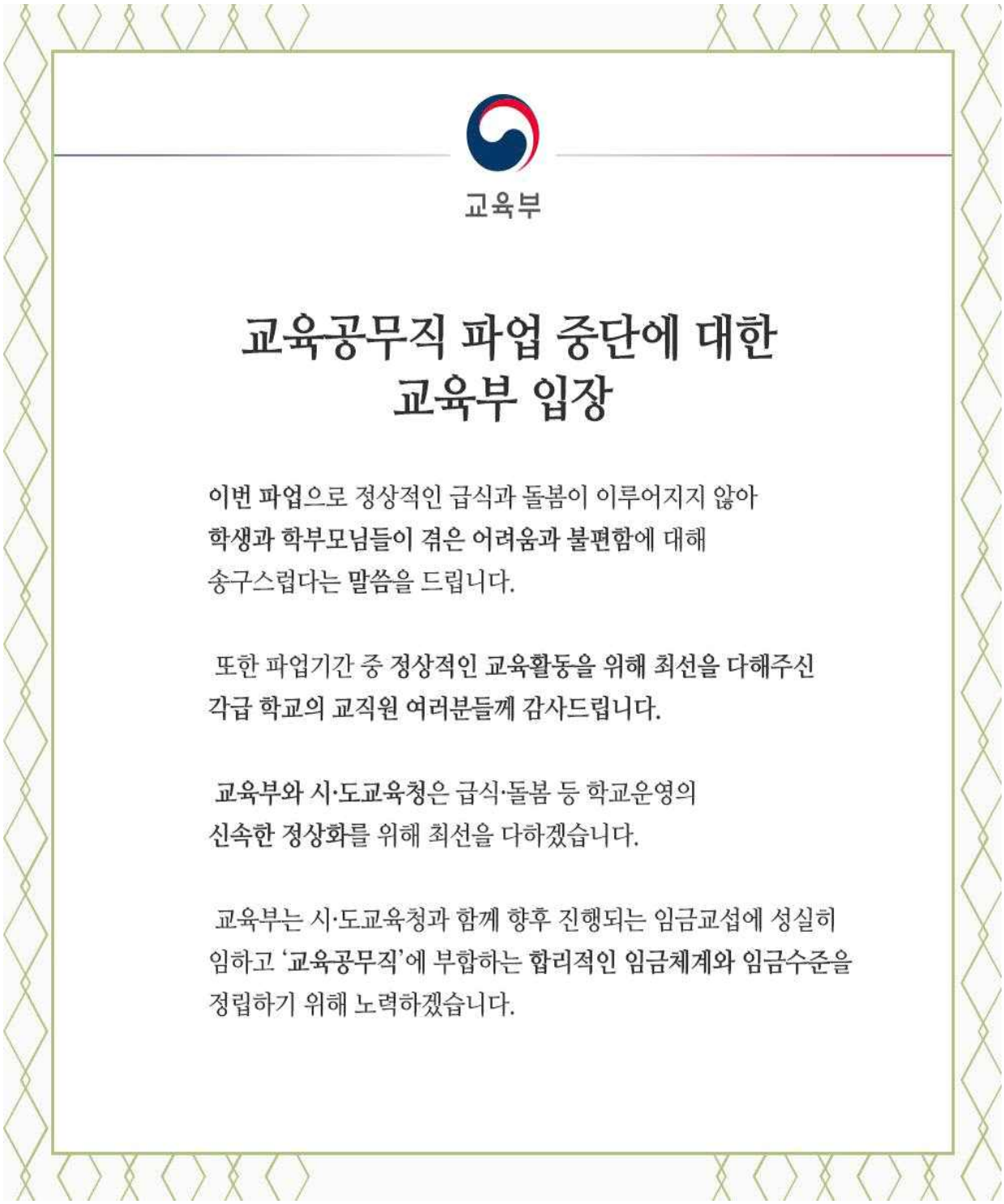
(서울=뉴스1) 이진희 기자 | 2019-07-09 06:00 송고

실종아동 찾기 +
강건 (남자) 2018년 12월 03일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트윗 인쇄 | + 확대

지난2일 오후 서울강남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과 정부·교육당국 실무교섭단이 총파업 관련협상을 하고 있다.이들은9일 오전 세종모처에서 다시 만나 임금교섭을진행한다.(뉴스1 DB)©News1 이승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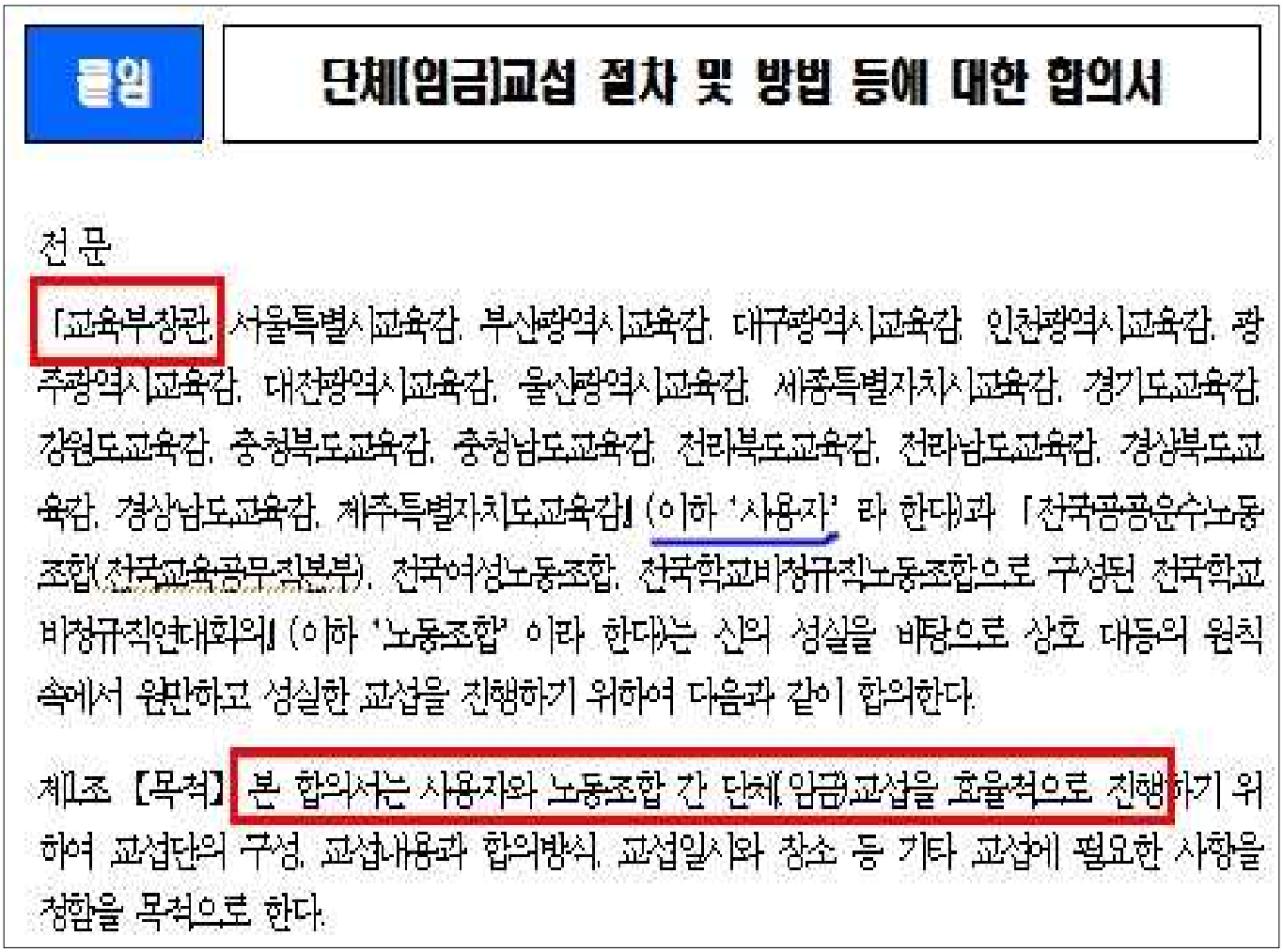
> 지난 7월9일자 뉴스1 보도 : 총파업 직전인 지난 2일 오후1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실무교섭에 참가한 정부,교육당국 실무교섭단 사진 게재됨 (교육부 김동안과장이 오후1시보다 30분 지각하여 교육부 진경호 사무관이 대신 교섭 석상에 앉아 기다리자, 언론들이 교섭을 스케치하는 장면) 총파업 이후 열린 9일 실무교섭을 앞두고, 교육부는 성실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7월5일 교육부의 성실교섭 약속 재확인하는 대국민공표

거짓말 2. ‘교육부는 사용자가 아니다’ 언론에 이중플레이

실무교섭 불참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는 언론에 익명으로 교육부는 사용자가 아니고, <교육청이 사용자이다.>라는 거짓말 언론플레이를 동시에 벌였다. 그러나 이는 집단교섭 절차합의서를 전면부정하는 명백한 거짓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일이다.



붙임

단체[임금]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전 문

「교육부장관,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대등의 원칙 속에서 원만하고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임금)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의 구성, 교섭내용과 합의방식, 교섭일시와 장소 등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6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중에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육부,교육청들과 체결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 사용자의 첫머리에 교육부장관이 명시되어 있어 주된 사용자임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등 책임 있는 이들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 마지막날인 지난 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7월9일자 이연희 기자 보도 : 파업마지막날 5일 교육부가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일에 교육부는 사용자가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고 입장 변경함.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이중플레이

연대회의 측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한 채 교섭이 중단됐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7월10일자 김준호 기자 보도 : 연대회의의 교섭위원 참여에 대해 교육부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함. 이는 파업전날 직접 교육당국의 실무교섭단을 주재하면서 국민과 언론 앞에 성실교섭을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

연대회의는 "전국적 사안인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예산·교육정책 등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시도교육감이 사용자인 만큼 교육부는 중재자로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교섭위원 참여해 안을 내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7월12일자 신중섭 기자 보도 : 교육부가 사용자가 아니다는 거짓말을 넘어서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교섭위원 참여해 안을 내는데는 부담'이라는 입장 표명함. 이는 총파업 직전의 교섭에 직접 참여하여 교섭을 주도하며 성실교섭을 약속한 대국민약속을 기만한 것임

거짓말 3. 총파업 직전 불합리한 임금 바로잡기 위해 성실교섭 약속에서, 총파업 후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이 교섭지연

앞 자료사진에도 나오지만 불합리한 임금 바로잡기 위해 성실교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총파업 후 교섭에서 교육부를 빼고 기존의 기본급 1.8% 인상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 **지난7월2일자 YTN 뉴스 보도** : 교섭장소 대여시간에 쫓겨 오후1시~오후3시30분까지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실무교섭을 오후4시경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동하여 실무교섭을 이어감. 최종결렬 관련하여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언론브리핑하는 김동안 교육부 팀장

붙임 3 **7월16일 교육부의 자가당착과 억지주장을 규탄한다**

교육공무직 관련 참고 자료

<'19.7.16(화). 교육공무근로지원팀 >

❖ **교육공무직 직위의 법률적 지위, 고용안정, 처우개선 현황 설명**

□ 교육공무직원 명칭 및 법률적 지위

○ 초기에는 개별 명칭(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으로 불렸으나, 2004년 **학교회계직원***으로 **명칭 통합**

* 학교회계직원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입·세출을 의미하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의되어 사용함

- 현재는 학교회계직원라는 명칭 대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정착**됨

※ 17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조례가 완비('12년 - '15년)되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받음

□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현황(18.4월 기준)

○ '18.4월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로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비정규직 16,838명**은 휴직 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근로자인 **전환 제외자**(4,938명)와 **정규직 전환 예정자***(11,900명)가 포함된 것이며,

- '18~'19년에 **전환 심의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에 따라 기존 제외자(55세 이상, 초단시간, 1년 미만)가 전환 대상자로(59세까지, 초단시간과 1년미만 포함) 대폭 확대되었으며, '19년에 정규직 전환 예정

- 1 -

자가당착과 억지주장1.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조례가 완비되어 있다’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2014년 2월에 내려졌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직도 사용자가 교장이라고 주장하는 격인 학교회계직을 공식명칭으로 쓰고 있고, 교육공무직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조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완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육공무직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전부가 완비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여론이 확산되자 얼마나 조급하게 입장발표를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16번째 교육공무직 조례를 제정한 경북교육청의 경우처럼, 교육공무직 조례는 학교비정규직의 명칭만 바꿀 뿐 처우개선을 하는 조치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당착과 억지주장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

교육부는 도대체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는게 얼마나 큰 혜택이라고 입장발표를 했는가?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받는게 당연하듯 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상식. 학교비정규직의 통일된 처우정비와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는 노조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의식하여 조급증에 빠져 무능력함을 고백한 꼴이다.

❖ 현재 노조 요구안 수용 시 재정 부담 추계

□ 노조 요구 사항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19년 임금교섭 공통요구안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2,500원→40,000원과 상한 폐지,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기상여금** 연 9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 이상→공무원과 동일 인상임

□ 필요예산 추계 : 약 0.61조

○ '1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의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고 **'18년 4월 교육공무직원**을 기준으로 추산

< 참고 3 : 19년 인건비와 노조요구 수용 시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총 인원(명)	'19년(현재)		노조 요구 수용 시		
	1인당 인건비 예산	인건비	1인당 인건비 예산	인건비	증감 액
142,864	30,130	4,304,492,320	34,400	4,914,521,600	610,029,280

※ '19년에는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증가 요인 예정

- 3 -

자가당착과 억지주장3. '학교비정규노조의 요구안은 6100억의 예산소요 '

6100억원의 예산이 실제 들어가는지는 산출근거를 서로 맞춰본 후에 확정해야 할 토론의 영역이다. 우리의 요구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업과 농성, 단식과 삭발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막기위한 대책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년 기준으로 매년 2000억원 수준의 처우개선이며, 지난 3년간 순증액된 교육재정(2016년

55조에서 2019년 74조원으로 증액)인 약 20조원의 1프로만 써도 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순증액된 예산의 1프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교육감들이 왜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따라 공정임금과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약속했는지 자성하기 바란다.

더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2프로대 인상으로 교육당국의 예산절감액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올해 단번에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처럼 발표하여 반대여론을 충동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입장 표명이후 인터넷에서 교육부의 주장을 근거로 반대여론(**네이트 판 캡쳐 참조**)이 움직이고 있다.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교육부라는 세간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교섭 대신 반대여론 조직에 나선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자들의 공간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교육예산에서 6100억원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막아주세요!!!
https://pann.nate.com/talk/347069499

KBS NEWS 분야별 시사·다큐

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요구, 인건비 6100억 원 더 들어가"

입력 2019.07.16 (13:37) 수정 2019.07.16 (14:35) 사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교육부가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인건비가 6천백억 원가량 더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 관련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이른바 학교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연간 인건비는 1인당 3천13만 원, 전체 4조 3천44억 9,232만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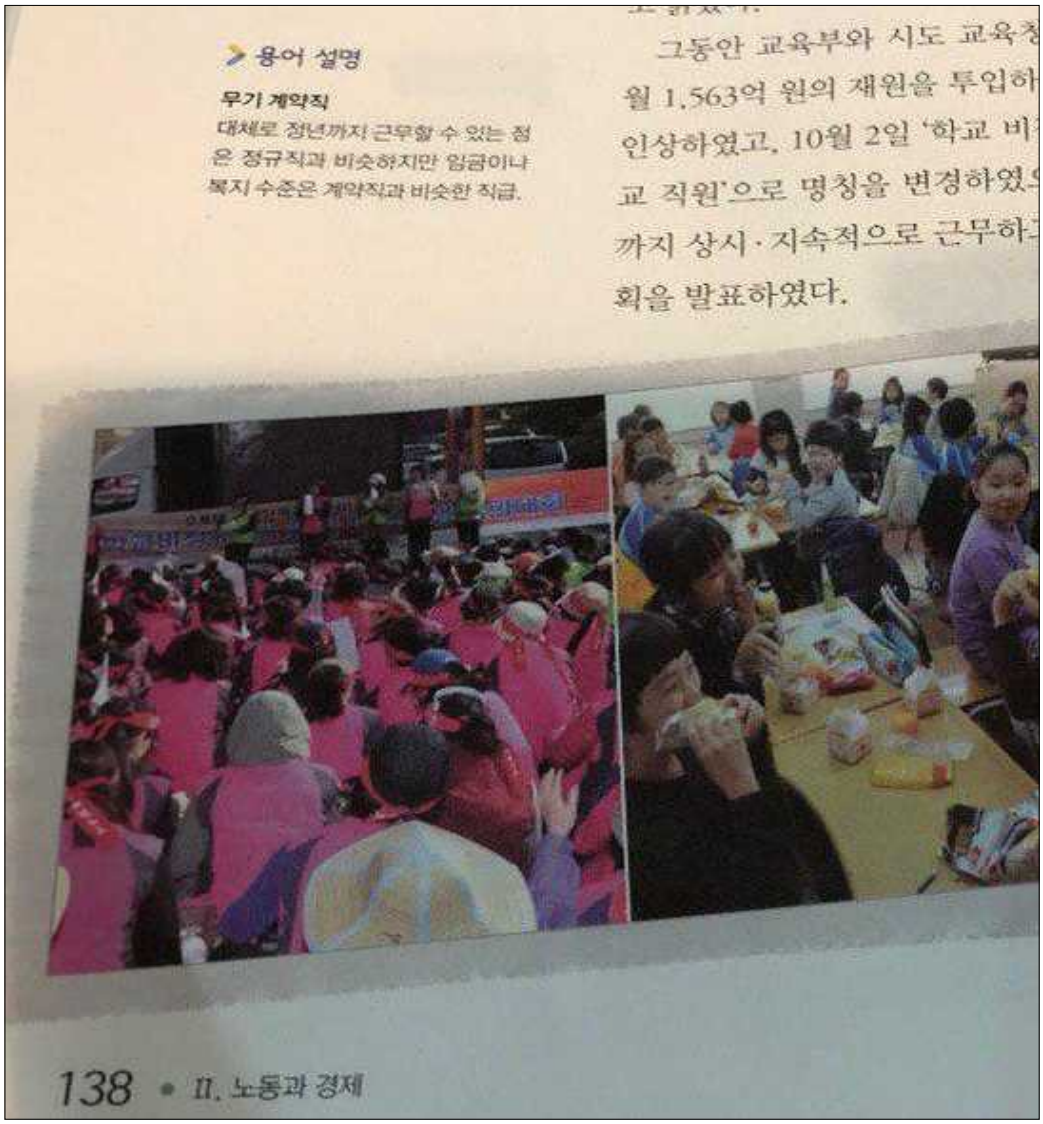
교육부는 노조 요구 수용 시 전체 인건비가 4조 9천145억 2,160만 원으로 증가해 6천백억 원가량을 더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당착과 억지주장4.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려야 한다 ’

지난 청와대 관계자의 기자간담회 때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파업으로 보도해야’ 주장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하여 이용주 의원의 학교비정규직 대책 질문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이라고 하시는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며 교육공무직으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그는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며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뉴시스 구무서 기자 7월11일자 보도



▶ 더불어사는 민주시민교과서 138페이지 무기계약직 용어설명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고등학생과정 민주시민교과서 138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수준이 계약직과 비슷한 직군'으로 정의되어 있다. 더욱이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2년지나면 정규직으로 돌아온다는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을 무기로 울며 겨자먹기로 무기한 기간제 임금을 받는 것이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법에 존재하지 않지만, 재벌이윤을 위해 국회와 노동부가 만들어낸 기형적 고용형태였다. 이를 박근혜 독재정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라면서 본격 추진한 것이 바로 무기계약 전환 정책이다.

박근혜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인 무기계약 전환정책을 생색내고 강조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붙임4 **기자회견문**

더 이상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다.

제2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을 선포한다.

지난 4월1일 집단교섭에 대한 요청을 시작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과 총 12회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시작부터 집단교섭 참가를 포기하였고, 재선 삼선의 교육감들로 포진된 교육감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교섭 진전을 지연시키며 파행으로 몰아갔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총파업 지지여론과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교육당국에 대한 규탄의 여론이 모아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교육부가 실무교섭에 참가하여 교육청 관료들과 함께 성실교섭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총파업이 끝나자 또다시 교육당국은 교육부는 실무교섭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고, 단 한치도 진전된 안이 없이 교섭지연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거짓말교섭이며 대국민사기극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실교섭을 약속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3일 파업이후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학교현장에 복귀한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성원하고 응원해준 학생들과 학부모,교사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어차피 교육당국의 이중성은 여러 차례 부딪히고 상처받아온지 오래이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이 드러난 지금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뜨거운 7월 태양아

래 진행한 3,4,5일 3일파업이후,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사병과 감기몸살을 겪고 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간부들도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3일치 일당마저 깎였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지난 상처가 다 나은 것처럼 감동하고 울었기에 후회는 없다.

다만 100인 삭발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지난 7월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아픈 몸을 추스르고 제2총파업을 일으키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면, 공공부문 100만 일자리가 정규직화 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민간 1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이 될 것이다.

총파업 전후로 바뀐 교육당국의 거짓말과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하며, 교섭을 중단하고 제2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다. 40,50대 여성들이 주축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비정규직 일자리를 청년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제2총파업으로 40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고,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2019년7월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